외국산, 한돈·한우로 둔갑…원산지 위반 '심각'

하계 휴가철 광주·전남 최근 4년간 152곳 적발

돼지고기 70% 육박…농관원, 과태료부과 등 처벌

광주 서구 소재 한 축산물 판매업체는 인터넷 오픈마켓을 통해 오스트리아산, 스페인산 양념돼지갈비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온라인으로 판매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품질관리원이 현장 방문해 원산지 검정 키트로 외국산임을 확인하고 적발한 결과 해당 축산물 판매업체의 위반물량은 38t에 달하며 2억원 상당인 것으로 나타나 형사 입건됐다.

목포의 한 음식점에서는 갈낙탕과 우거지갈비탕의 메뉴를 판매하면서 호주산 소갈비를 배달 앱과 업소 메뉴 게시판에 국내산 한우로 거짓 표시해 형사 입건됐다. 해당 음식점의 위반 물량은 1.6t으로 3천952만원가량을 편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4년간 여름 휴가철 광주·전남지역에서 외국산을 한돈이나 한우로 속이는 등 축산물 원산지 위반 업체가 150곳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광주·전남 하계 휴가철 축산물 원산지 위반 업체는 2022년 41곳, 2021년 36곳, 2020년 24곳, 2019년 51곳 등 152곳으로 확인됐다.

농관원은 지난달 11일부터 이달 12일까지 33일간 축산물 원산지 표시 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광주에서는 거짓표시 5곳과 미표시 3곳 등 8곳이 적발됐고 전남에서는 거짓표시 22곳과 미표시 11곳 등 33곳이 적발됐다.

지속적인 단속은 진행하고 있지만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는 위반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농관원 전남지원의 설명이다.

전국적으로는 1만6천513곳 중 202곳(230건)이 적발됐다.

축산물 원산지 단속 품목별로는 돼지고기, 쇠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염소고기 등이며 거짓표시와 미표시 두 가지를 단속한다.

품목별로는 돼지고기가 158건(68.7%)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쇠고기 45건(19.6%), 닭고기 20건(8.7%), 오리고기 4건(1.7%), 염소고기 3건(1.3%)으로 집계됐다.

농관원 전남지원은 원산지 단속을 상시 진행하고 있으며 추석을 대비해 추석 명절 전까지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 방법은 사전 공지 없이 직원들이 업체에 방문해 식품 원산지 표시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방식이다.

농관원 전남지원 관계자는 "소비자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원산지 표시 철저 단속을 하고자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도 철저한 단속을 통해 우리 농산물을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 및 과태료 처분 등이 이뤄졌다. 만약 2년 이내 재적발 될 경우 최고 3억원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거짓표시의 경우 형사입건되며 미표시의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다인기자

한반도 평화통일 공감 캠페인 25일 오전 광주 북구청 광장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북구협의회 주최로 한반도 평화통일 공감 확산 캠페인이 열렸다. 이날 진행된 캠페인에서는 평화문구가 새겨진 커피와 마스크 배부로 주민들에게 평화통일을 홍보하고 을지연습에 참여한 공무원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김영근 기자

5·18재단, 왜곡 게시물 1천274건 적발

'폭동' 표현 75%…'북한군 개입' 주장 8월 급증

5·18기념재단은 25일 "올해 들어 이날까지 5·18 왜곡 게시물 1천274건에 대해 삭제·신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재단에 따르면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 사실이 생성되고 확산되는 인터넷 게시물에 대해 모니터링이 실시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8월 현재까지 재단에서 삭제·신고 조치한 게시물은 총 1천274건이다.

재단이 온라인 상 게시물을 내용별로 분류한 결과 ▲폭동 955건(75%) ▲북한군 개입 223건(17.5%),▲기타 96건(과정 왜곡, 유공자 허위사실 등 7.5%)으로 분석됐다.

이에 대해 재단은 839건에 대해선 삭제조치를, 435건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민원 접수했다. 이 중 164건은 현재 삭제된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재단은 주목할 만한 점으로 왜곡 게시물 가운데 8월에 '북한군 개입'설이 가장 많이 발견된 점을 꼽았다.

실제 재단의 집계결과 지난 7월 '북한군 개입' 관련 게시물은 30건에 그쳤으나, 이달 들어서는 24건이 증가한 54건으로 집계됐다.

또 올해 수집된 왜곡 게시물 정체 223건 중 24%에 달하는 54건이 8월에 작성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재단은 '북한군 개입'을 주장하는 집단이 상호 정보를 공유하는 등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재단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제출한 통신민원 및 SNS 신고가 현재 접수된 상태지만, 일부 채널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삭제 등의 조치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25일 기념재단 관계자는 "민주언론시민연합의 협조를 통해 재단의 모니터링이 닿기 어려운 기사의 댓글들까지 수집 및 검토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왜곡·폄훼를 조장하는 댓글 58개를 확인해 해당 포털사이트에 신고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안재영기자

대법, '방문진 이사장 모욕' 광주MBC 前사장 무죄 판단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을 소셜미디어(SNS)에서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일준 전 광주MBC 사장에게 2심까지 내려진 유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5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사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무죄 취지로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사용한 표현이 '모욕적 표현'에 해당해 (모욕죄) 구성요건이 인정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공적 활동과 관련한 자신의 의견을 담은 게시글을 작성하면서 이 사건 표현을 한 것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없어진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송 전 사장은 MBC PD협회장이던 2017년 페이스북에 고 전 이사장이 시민단체에 고발당했다는 내용의 기사 링크를 올리면서 '간첩 조작질 공안검사 출신 변호사', '철면피 파렴치 양두구육(羊頭狗肉·겉과 속이 다름)', '극우 부패세력' 등의 표현을 쓴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고 전 이사장의 고소로 수사를 진행한 뒤 송 전 사장을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송 전 사장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심은 "이 사건에서 '조작질', '철면피', '파렴치' 등은 비속어는 아니지만, 인신공격성 표현으로, 고소인의 사회적 평판을 저하하거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모욕에 해당한다"며 유죄 판단을 내렸다.

2심은 1심의 판단을 대부분 그대로 인정하면서도 '간첩 조작질' 부분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이므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놨다. 판결은 1심과 같은 벌금 50만원의 선고유예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송 전 사장을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문제의 표현이 나온 시점에 송 전 사장은 PD협회장으로서 MBC 감독 기관인 방문진 이사장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는 점, 게시글의 전체적인 내용이 '고발을 당한 고 전 이사장에게는 방문진을 이끌 자격이 없다'는 취지라는 점 등이 근거다.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언론이나 정치 영역에서 빈번하게 쓰이는 이번 사건 속 표현이 모욕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표현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표현 자체의 문제점은 지적하면서도 위법성 조각 여부를 판단할 때의 고려사항을 제시한 것"이라며 "비정치적 영역과 비교해 정치적 영역에서 표현의 자유는 더 강조된다는 점을 밝힌 데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난방공사, 나주 SRF 사용 소송도 승소…법적분쟁 마무리 수순

사업 개시 신고 대법 승소 후 7월부터 SRF 발전소 정상 가동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전남 나주시를 상대로 한 고형폐기물(SRF) 열병합발전소 사업 신고와 관련한 소송에서 승소한 데 이어 연료 사용 허가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광주지법 행정1부(박현 부장판사)는 25일 난방공사가 나주시를 상대로 낸 고형연료제품 사용 허가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난방공사의 손을 들었다.

법원은 관련법을 준수했음에도 나주시가 위법한 처분을 했고 고형연료 품질이 부적합하더라도 허가 취소가 아닌 경고와 금지 및 개선명령 등을 해야 한다는 난방공사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는 나주 혁신도시에 온수와 전기를 공급할 목적으로 2천700억원을 들여 2017년 9월 준공됐다.

그러나 시험가동 과정에서 광주 생활쓰레기 반입 논란, 일부 주민의 유해성 주장 등 반대가 겹치면서 나주시가 가동을 불허했다.

난방공사는 앞서 2017년 11월과 2018년 6월 연료 사용 승인과 사업 개시 신고를 접수했으나 반려됐고 2020년 12월에도 사업 개시 신고가 반려당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나주시는 SRF 파쇄 사용계획과 환경오염 방지책 마련 등을 요구하며 사업계획을 변경하지 않으면 수리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이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나주시는 지난해 10월 고형연료 품질검사 결과 기준치를 초과했다며 연료 제품 사용 허가 취소 통보를 했다.

이에 난방공사는 연료 사용 허가 취소의 적법성을 다투는 가처분 및 본안 소송을 별도로 제기했다.

난방공사는 사업 개시 신고와 관련한 행정소송에서 대법원에서 승소가 확정되자 지난달부터 나주 SRF 발전소 정상 가동을 시작했다. /오복기자

경찰관에 손찌검·행패 취객 입건

경찰관을 밀치거나 손찌검한 취객이 잇따라 입건됐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25일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40대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20분께 광주 광산구 쌍암동의 한 술집에서 B경위의 가슴을 밀친 혐의를 받고 있다.

B경위는 업무방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술에 만취해 '가게에서 나가달라'는 요구에 격분해 난동을 부리다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또 일선 지구대 소속 경위를 때린 50대 C씨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C씨는 24일 오후 8시20분께 택시 요금 문제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뺨을 2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이옥근기자